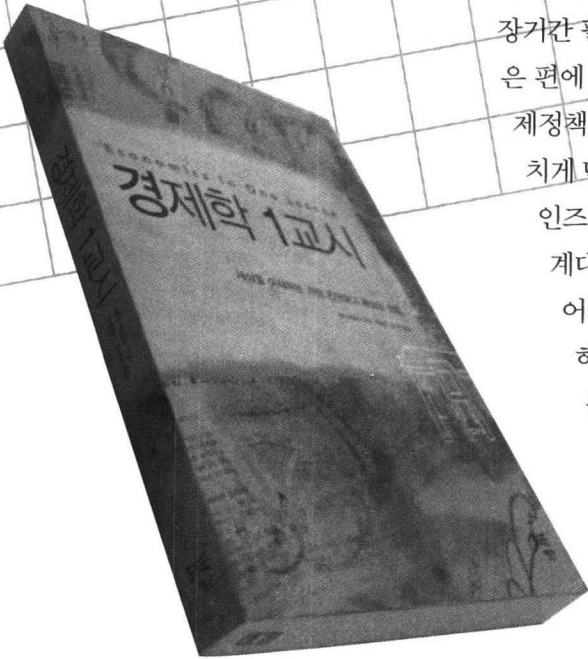


# 헨리 해즐릿의 《경제학 1교시》 케인즈식 경제학 통렬히 비판 장기적·보편적 경제정책 영향 분석

글\_ 최용식

이 책은 1946년에 초판이, 1978년에는 개정판이 나왔고, 국내에서는 2005년에 번역서가 나왔다. 그만큼 오랜 전통을 자랑한다. 교과서도 아닌 책이 이렇게 장기간 팔리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수준이 제법 높은 편에 속하고 설득력과 호소력도 큰 편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케인즈 식의 경제정책 즉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줄기차게 비판한다. 지나치게 단순한 한 주제에 집착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될 정도로 집요하게 케인즈 식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따진다. 그렇지만 이 책이 처음 출간된 해가 세계대전 직후로, 당시는 케인즈 경제학이 자본주의 경제를 구원할 것으로 믿어지던 때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지금은 케인즈 식 경제정책을 펼치는 나라를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저자의 선견지명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학 1교시》 헨리 해즐릿 지음 | 전동균 옮김 | 행간 | 274쪽 | 값 12,000원

사실, 케인즈 식 경제정책은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유행병처럼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갔고, 각국 정책당국은 이 정책으로 호경기를 영원히 지속시킬 수 있을 것처럼 믿었다. 그러나 그런 정책이 오히려 국가경제를 장기간 침체의 늪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이 곧 밝혀

지고 말았다. 특히 이 정책에 가장 충실했던 미국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리면서 그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장 크게 당해야 했다. 심지어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서 거의 모든 산업시설이 초토화되었던 일본과 독일 경제와의 국제경쟁에서도 밀려야 했다. 그래서 1980년대 이후에는 케인즈 식 경제정책이 역사의 뒤편길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케인즈 식 경제정책의 실패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은 1990년대의 일본 경제에 의해서였다. 잘 나가던 일본경제가 1990년대에 들어선 뒤에 경기부진의 늪에 빠져들었는데, 이걸 벗어나기 위해 십여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재정지출 확대를 단행했으나, 경기는 살려내지 못하고 국가부채만 엄청나게 쌓이게 하였다. 그러자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다시 시도되지 않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책의 주장이 옳았다는 사실이 현실에 의해서 증명된 셈이다.

이 책을 더 높이 평가해야 할 점은 바로 다음과 같은 점이다. '어떤 제안된 경제정책의 영향을 연구할 때는 단기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결과도 추적해야 하고, 일차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부차적인 결과도 추적해야 하며, 특정 그

### ●이 글을 쓴 최용식은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5년간 대한투자진흥공사에서 근무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과학적으로 해체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세우겠다는 뜻을 품고 직장을 그만둔 뒤 30년 넘게 이 문제에 천착했다. 현재 21세기경제학연구소(www.taeri.org)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글쓰기 작업을 하고 있으며 쓴 책으로는 《사상과 경제학의 위기》 《경제역적들아 들어라》 《대한민국 생존의 속도》 《대한민국 생존의 경제학》 등이 있다.

름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추적해야 한다. 따라서 어느 특정한 곳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것, 즉 예를 들어 모든 산업을 고려하지 않고 한 산업에서만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잘못되기 쉽다.(135쪽) 이런 오류는 오늘날 우리 경제전문가 사회에서는 더욱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에는 이런 구절도 나온다. '새로운 산업이 충분히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산업들이 위축되거나 사멸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본과 노동을 오래된 산업들이 양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만약 우리가 마차시대의 교역을 인위적으로 유지하고자 했다면 자동차산업과 그와 관련된 모든 산업의 성장이 늦춰졌을 것이다. 우리는 부의 생산을 하락시켰을 것이고 경제 및 과학의 진보를 지체시켰을 것이다(134쪽)'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만연한 잘못된 의제 중 하나인 '산업공동화'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 산업시설들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옮겨가고, 이에 따라 국내 산업단지는 텅비어가고 있다면 큰일이다. 산업시설이 점점 줄어들면 생산이 줄어들고, 생산이 줄어들면 고용도 줄어들고, 고용이 줄어들면 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산업공동화가 진짜로 사실일까? 부분적으로는 틀림없이 그렇지만, 전체적인 현상은 아니다. 산업공동화는 진실과는 거리가 먼 셈이다. 만약 산업공동화가 전체적인 현상이라면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생산은 줄어들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생산은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왔다. 2005년말의 산업생산은 5년 전인 2000년에 비해서는 50% 정도가 증가했고, 1999년에 비해서는 70% 이상 증가했다. 산업시설이 해외로 이전되고 있다는 데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까? 해외로 이전하는 산업시설들도 있었지만, 새로운 산업시설들이 국내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산업공동화가 고용을 줄이는 등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줄기차게 제기되었다면 혹시 모르지만, 산업공동화가 진행된 것처럼 보였음에도 실업률은 크게 올라가지 않았다. 아니다. 오히려 이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해야 한다. 해외로 이전하는 산업시설들은 대부분 국내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던 것들이었다. 국내의 임금상승을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에 해외로 이전했다. 그럼 '국내 임금상승을 견뎌내지 못하여'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국민소득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과연 나쁜 일이고 우려해야 할 일일까? 아니다. 적극적으로 환영할 일이다. 그렇다면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도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 국민들은 산업공동화 때문에 우리 경제가 무너질 것처럼 걱정해야 하지 않았던가! 이걸 너무 어이없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오래 전에 출판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는 충분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 책이 최고수준이라고는 말하기는 어렵다. 논리적 모순이 도처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 하나만 꼽자면, 물가상승에 대한 과도한 적개심이 그것이다. '인플레이션의 경고음이 국가들을 차례로 경제적 재난의 길로 유혹했다(214쪽)'고 단정할 정도이다. '인플레이션주의자들은 통화량의 대폭적인 증가가 구매력을 감소시킨다는 것, 즉 상품가격의 인상을 가져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주저하지는 않는다. 도리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은 인플레이션을 원한다.(216쪽)'

쉽게 말해서, 인플레이션으로 이득을 볼 자들이 그걸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책의 저자처럼 통화량 증가를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일까? 혹시 자산소득 또는 이자소득에 기대어 생활하는 기득권 계층은 아닐까? 통화량이 적절히 증가하지 않으면 물가가 떨어지고, 그러면 이들의 구매력은 더욱 커지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닐까?

이 책의 저자는 스스로 밝혔듯이 '자유주의자'다.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국가경제를 시장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보수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보수주의자로서 자신의 계층을 옹호하고 있는 셈이다. '다른 계층에 대한 영향'을 강조했던 그가 이 점에 있어서는 전혀 그걸 고려치 않았다. 이걸 논리적 모순이다. 사실, 물가가 완만하게 상승할 때에 경기는 호조를 보이곤 한다는 점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이걸 역사의 문제만도 아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물가상승을 용인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지금 자본주의 역사상 최장기의 호기기를 구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기가 호조를 보이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용인해야 하고, 그래야 실업률이 낮아지는 등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있다. 이게 과연 잘못된 정책일까? 그밖에도 이런 오류는 여러 가지가 발견되지만, 지면 관계상 그건 독자들이 스스로 밝혀낼 일로 남겨두고자 한다. ❦